

데스크시각



윤현식
정정부 부국장

“천에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199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6개월여 만인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득권 세력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이 가진 최고의 권한인 긴급명령으로 전격 발표해버렸다. 그는 담화에서 “금융실명제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꽃 피울 수가 없다”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도 개혁으로, 금융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실종된 한국, 전고해진 기득권

당시 재벌을 대표했던 한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비롯해 정치인, 고위 관료 등은 금융실명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생산성 저하, 추가 폭락, 자본 해외 유출 등의 이유를 열거하며 손사레를 쳤지만 대통령은 신념을 갖고 이를 밀어부쳤다. 대통령의 바른 판단과 정부의 적절한 추진 전략, 개혁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등의 조화 속에 금융실명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정부를 이끌었던 김대중 대

국민은 개혁을 원한다

통령은 IMF 구제금융 극복이라는 과제를 떠안고도 건강보험 개혁을 완료했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닦았으며 일부 희생을 감수하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수도 이전을 추진했다가 물러서야 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거졌고 야당의 찬성까지 얻어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막혀버린 것이다. “서울이 수도권이라는 것이 불문 헌법에 해당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헌재의 판단으로 인구·기업·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촉진되면서 지금 지방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을 핑계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낮췄으며 권력기관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을 감싸고 그들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부의 편중과 양극화를 부추겼다. 정부 기능과 역할에 있어 공익의 관점은 사라지고 민간기업 시스템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격차와 갈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퇴행적 통치 행위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거나 비선을 통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이어졌다.

촛불을 든 국민의 바람과 기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적폐 정산에 집중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고 이후 검찰 개혁에만 매달리며 혁신 역량을 소모하는 과오를 범했다. 그에 더해 주요 개혁 현안이었던 수도권 과밀·부동산·교육·세제 등을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 시민단체 출신 등에게 맡겨 현장과 괴리된 시책들을 내놓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상실해갔다. 개혁을 표방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준비, 전략, 인제,

동력 등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력과 체제, 이념을 흡수해 진용을 짜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고 해질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방지되었던 문제들은 더 심각하게 전개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부풀어졌다. 주거비, 교육비의 대책 없는 상승은 젊은층의 결혼·출산 거부로 이어졌고 계속되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방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계급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경호실 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의 시간, 개혁을 주제로 경쟁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10개월만에 첫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추가 배정에 나섰다. 소득이 줄어든 수 있는 의료인들은 매년 그랬듯 메스를 내던지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마무리될 지 지금 당장 전망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시도에 국민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한 의대 증원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전담권에 국립 의대 설립 등 의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는 진정한 의료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유층 증세, 공교육 강화 등 수십년 간 정치권에서 봉인되어버린 개혁 과제들을 꺼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정치의 시간이다.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주제로 경쟁하며 국가와 미래에 기여하는 순간이 오기를 바란다.

은편칼럼



박상하
나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을 로치데일공정선거자조합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보다 75년이나 앞선 펜윅위버조합이 공식 기록에 등장한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지역 상인이나 자본가들의 폭력에 맞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로버트 오언같은 선구자적 실험이 기록이 되어 협동조합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자본주의의 횡포에 맞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시항작오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협동조합은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화했고 우리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정과제로 삼았다. 2023년 UN 총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2022년 채택된 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과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과 사회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매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그레이트 리셋하라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서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형국이다. 새해 들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했던 청년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고 중간 지원기관들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결과에 대한 형식적 책임은 정부 정책 변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용적 책임은 들어다 볼 것이 많다. 세상을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이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듯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가 좌파나 진보의 소유물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경제가 특정 이데올로기의 전유물이라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색깔론과 정치적인 쟁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공과를 추려서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옥석을 가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내용적인 책임을 따져 보려면 지난날의 성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약체(GSEF)는 서울시 주도로 설립하여 7년 간 의장 도시를 맡아 2년마다 국제 포럼을 진행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이랄지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혁신에 눈을 뜨게 해 준 풀뿌리 경제활동의 구심점에 불을 지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거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일까. 바로 정부 주도에 의한 옥석 정책이다. 가장 뼈아픈 반성문을 써야 할 지점이다. 이 부분에서는 행정과 사회적경제 당사자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공범일 수 있다.

지역중심이 아니라 성과에 집착했던 행정당국은 양적 숫자에만 집중했고 당사자들은 보조금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시민사회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개입할 여지가 없다보니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별거뿔거졌다. 우리 광주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로 사회적경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확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 육성정책의 희생양에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초창기 협동조합의 양적 비중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던 것은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축색가 되어 휴면상태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에서 시도했던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출자증권의 상장이나 거래 활성화, 비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자본조달 등은 모두 주식회사의 경영 방식을 모방하다 무너졌다. 투자 유치와 규모화에 골몰한 나머지 무늬만 협동조합이지 주식회사와 다를 게 없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이용가치의 극대화에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으며 협동조합의 위기는 정체성을 망각할 때마다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줬다. 레이들 로 박사가 강조했던 위기 중에서도 사상의 위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협동조합이 태동했을 때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신으로 말이다. 그레이트 리셋이다.

기고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2019년 3월 광주시는 도심내 상업지역에 주거용 90%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의 3배가량 많은 600%를 적용해 광주 도심에 4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이 도심경관을 해치고 교통난을 유발하며 학교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거용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을 의무비율로 정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주거용외의 용도비율에서 준주택은 제외하며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용적율을,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에 대해 400%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용도용적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역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본격적인 역세권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큰 우려를 낳았고 설상가상으로 2020년 6월에는 준주거,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적율 마저 과도한 주거단지화 등을 이유로 250%로 대폭 낮추면서 사실상 주거시설 공급을 막아버렸다.

광주시, 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최근 전국 부동산시장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에서 전방-일선 부지 개발, 어등산 복합쇼핑몰 건립, 신세계 확장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 광주는 지역경제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광주시가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주거기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용도용적제를 강화한 도시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이 비주거비율의 확대에 따라 상가 난개발과 공실의 원인으로 작용해 오히려 기반시설과 상가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구도심의 상업지역을 더욱 슬럼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수직식 위주로 상업용 지 비율을 높여 계획돼 단지내 건물 880여채 가운데 상가건물이 36%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속에 결국 공실률이 43.4%에 달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속에 최근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주거비율을 높여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용도용적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민간이 역세권 개발시 용적율을 높이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이나 공공 오피스로 기부받아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과 대전, 전주도 용적률 완

화 등 규제 완화와 행정적 뒷받침을 동반하고 있다.
이제 광주도 규제 일변도 행정에서 벗어나 원도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적절히 제시해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이 가미된 주거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역세권 시대가 열리며 상업지역 내 주택공급이 필요해진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 제한을 풀면서 주차장 확보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원도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적절한 주거 복합개발을 통한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합리적 가격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날로 치솟고 있는 분양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광주시도 여기에 발맞춰 현실에 맞는 주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지역 주택건설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 일조해야 한다.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지역사회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했고 이제는 이전 집행부의 정책 오류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방향 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社說

막 오른 광주상의 회장 경선 ‘돈 선거’ 오명 벗길

지역 경제계의 수장을 뽑는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18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디케이의 김보곤 회장과 가드레일 제조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두 회장은 지난 26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의 변으로 “과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광주경제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와 “지역에 봉사할 기회라고 생각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각오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 경제계의 수장을 목표로 나선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봉사자의 기호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광주상의 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 사례가 많아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는 각오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 경제계의 수장을 목표로 나선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봉사자의 기호로 삼겠다는 것이다.

‘걷고 싶은 길’ 조성, 도시활력 강화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가 변화하는 추세다. 특히 걷고 싶은 도시는 전 세계가 추구하는 공통의 지향점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덴마크 코펜하겐 등은 관련 법규를 고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 도심 활력을 만들고 이를 도시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다양한 테마를 담은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시는 연말까지 ‘도시의 회복, 걷고 싶은 길’을 기치로 연말까지 8대 대표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곳은 광주공원 일대 무허가 포장마차촌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청춘빛 포차거리’다. 포장마차촌은 광주시 앞길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지만 무허가 영업에 따른 비 위생적인 영업방식, 열악한 화장실 시설 등 민편의 등을 갖춘 공간으로 세단정하고 다

한 결과 575개 업체가 30억원을 웃도는 회비를 냈다. 3년전 제24대 선거에 비해 200개 업체가 늘었고 이로 인해 선거권 총수도 3304개로 집계됐다.

광주상의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인 1표가 아닌 회비 납부액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지는 투표권에 있다. 먼저 투표권을 가진 상공의원을 선출한후 이들이 회장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인데 회비 납부액에 따라 최대 30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돈 선거의 원인이 됐고 선거 때마다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내 제조업계내 하며 업종별로 힘겨루기 양상도 선거 과열을 낳는 원인이다. 이번에는 출마자 모두 금권선거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바란다. 돈 선거의 오명을 벗어안 선거 뒤 갈등과 회원 이탈이란 반복되는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문화관광도 조성할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을 잇는 길은 오는 12월부터 ‘일요일 차 없는 전당길’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 2차로 도로를 차도와 보도가 섞인 가변형 5차로로 확장하고 매주 일요일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계획이다. 그밖에 국립공원 무등산에는 맨발 힐링길과 어린이 체험숲 등을 갖춘 ‘명품길’을 조성하고 역사 명소 영산강변에는 ‘서창 감성 조망길’을 만든다. 또 공유 자전거 보급을 통한 ‘평균 15분 자전거길’, 예술의 전당, 아시아예술정원, 비엔날레전시관을 잇는 ‘미술관 산책길’ 등도 구축한다.
걷고 싶은 길은 도심 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시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체계대로 된 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 순천 신대지구를 포함한 해룡면이 뜬금없이 기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편입돼 순천·광양·곡성·구례 울로 변했다. 광양시와 인접한 순천시 해룡면만 떼어 내 기존 선거구에 붙이는 경계 변경만 한 것이다. 총선을 불과 39일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해룡면 유권자 3만5000여명은 순천에 살면서 얼굴·이름도 잘 모르는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만 했다. 후보들도 당

한 경선 등 공천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전남은 10개 선거구 중 단 한 곳만 단수 공천했을 뿐이다. 9곳은 여전히 누가 후보가 될지 ‘오리무중’이다. 해당 선거구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의 지방 선거구 획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20대 총선에서는 42일, 19대 총선 때는 44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는 그동안 유권자와 인지도 낮

‘깜깜이’ 선거

은 정치 신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으로 비친다. 선거구 획정은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인구 조사결과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은 더욱 그렇다. 인구수에 따른 강제적인 선거구 획정과 행정구역의 무시한 선거구 획정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지역의 10개 의석수는 변함이 없지만 기존 선거구 중 4곳을 제외하고는 6곳이 모두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유로 광주 8개 선거구에 대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 항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